

# 교육 없는 대통령 공약,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기고



**박철홍**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

대통령 선거가 다시 코앞으로 다가왔다.

후보 간 토론회도 열렸고, 다양한 정책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매번 대선을 지켜보며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다.

‘교육에 대한 공약’이 유독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교육정책이 대선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된 적은 거의 없었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만연한 수많은 부조리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그 시작은 교육에 있다.

최근 사회를 크게 흔들고 있는 비상계엄 논란, 검찰권 남용, 사법 정의의 왜곡 등 굵직한 문제들 역시 결국 ‘공부 제일 잘했던’, 이른바 우리 사회 최고 엘리트들이 벌인 일들 아닌가? 시스템의 허점도 문제지만,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 자체의 문제가 더 근본적이다.

사람은 교육을 통해 길러지는 존재다. 지금처럼 ‘전교 1등’만을 위한 경쟁 중심의 교육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또 다

른 ‘문제적 인간형’을 끊임없이 양산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인간들이 조직의 개혁과 법의 개정을 무력화시키며, 다시 기득권이 되고자 할 것이다. 결국 ‘언발에 오줌 누는 식’의 땀질 개혁으로는 근본을 바꿀 수 없다. 원초적으로, 제대로 된 인간형을 키워내는 올바른 교육 방식이 절실하다.

이 점에서도 더 안타까운 것은, 소위 진보정권이라 불리는 민주당마저 교육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실망스러웠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보수 정권보다도 더 무기력했고, 때로는 퇴행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민주당이 교육 문제에 대해 더는 방관해서는 안된다. 시대정신과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이 바로 교육이다.

그 중에서도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입시 중심 과목이 아닌 만큼, 의지만 있다면 비교적 손쉽게 개혁할 수 있는 분야다. 왜곡된 시선이 아닌, 균형 있고 깊이 있는 역사 교육이 이뤄져야 우리 사회의 토대가 바로 설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은 한국사를 ‘암기 과목’으로 인식한다. 연도, 왕 이름, 문화재 명칭 등을 외우는 데 치중된 교육은 역사 흐름과 맥락, 의미를 가르치지 않는다.

이처럼 한국사 교육은 점수와 등급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고, 교육 본래의 목

적은 사라졌다. 우리 학생들이 역사의 의미와 맥락을 배우지 못한 채 무작정 외우기만 한다면, 역사교육은 그 자체로 실패한 것이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중요한 이유는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고 교훈을 얻는 일이다.

‘역사로부터 배운다’는 것은 과거의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이런 점에서 역사교육은 과학교육처럼 ‘오류 수정’의 정신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역사는 수많은 인간의 삶을 뒤바꾸고, 잘못된 역사 인식은 고통을 낳는다. 그렇기에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인간의 횡포를 인간의 힘으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며, 그것이 바로 역사교육 핵심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사교육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질적 전환이다. 현재처럼 암기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아무리 교육을 강조해도 의미가 없다. 입시 경쟁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암기 부담’만 더해줄 뿐이다.

역사교육 변화는 전체 교육체계 개혁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 역사교육, 제대로 바로잡아야 할 때다.

## 社說

### 해상풍력·AI센터 제대로 알고 비판해야

#### 이준석 막말 발언 논란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는 망상”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지역 내 반발이 거세다. 이 후보는 “풍력은 불안정하고, 해남엔 해저케이블이 없어 데이터센터에 부적합하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정면 비판했다. 그러나 전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핵심 전략사업에 대한 일방적 폄하하는 지역사회의 강한 반감을 샀다. 해남 솔라시도 AI 데이터센터와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등 단지 공약용 프로젝트가 아니다. 이는 탈탄소 시대를 대비해 전남이 수년 전부터 준비해 온 중장기 전략사업이다.

이 후보는 “풍력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들어 해남이 부적지라고 주장했지만, 현재 전남도와 업계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수소연료전지, 송전망 확충 등 다양한 보완 수단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 신안 해상풍력 1단지는 ‘선접속 후제어 방식’을 도입해 발전량의 불확실성을 기술적으로 보완했다. “해저케이블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국내 통신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해저케이블 없이도 6개월이면 고속 통신회선 연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물론 우려와 지적은 필요하다. 해상풍력의 외국계 의존도가 높은 건 사실이고,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안정성에 대한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것도 맞다. 그러나 그 자체를 이유로 ‘망상’이라거나 ‘불가능’이라 단정짓는 태도는 과학적 근거도 없고 정책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지방정부가 10년을 내다보고 짠 미래전략을 일거에 허물어뜨리는 식의 발언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는 있겠지만, 지역의 신뢰와 산업 생태계에는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정당 간 비판이 아니라 사실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경쟁이 필요한 이유다. 특히 에너지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해남과 신안이 그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는 중이라면, 필요한 것은 발목잡기가 아니라 냉철한 토론과 제도적 보완이다. ‘비판’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다만 그것이 지역을 위한 것이라면 적어도 ‘알고 하는 비판’이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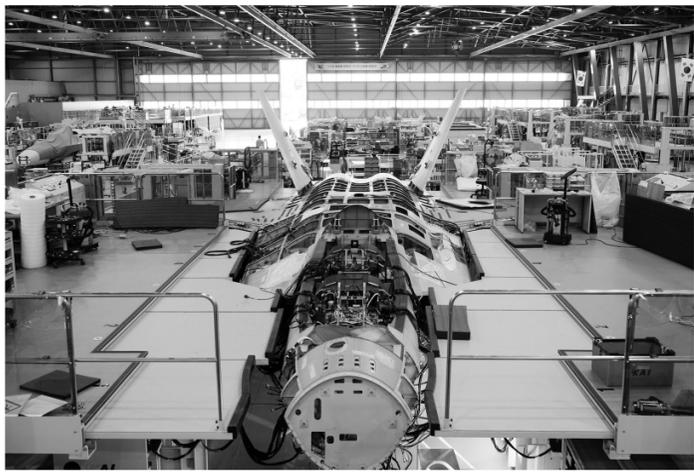
### 금타 화재 완전됐지만 갈길 먼 정상화

#### 경제 먹구름·분진 피해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가 발생 77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지난 17일 새벽 시작된 대형 화재는 광주 광산구 어룡동 일대를 짙은 연기와 분진으로 뒤덮으며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소방당국과 지자체의 총력 대응 끝에 불길은 꺾였지만, 이제 시작된 ‘이후’가 더 큰 문제다. 공장 복구와 주민 피해 보상, 고용 안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무엇보다도 피해 규모 파악과 복구 일정이 불투명하다. 제2공장이 전소된 상황에서 금호타이어는 현재 보험에 가입돼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보상금은 손해사정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2023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처럼 원인 규명과 공장 재가동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생산직 노동자 2200여 명과 공장 내 외주인력, 60여 개 협력업체가 타격을 입고 있다. 현재는 유급휴업 중이지만, 장기화될 경우 고용 불안과 생계 위협이 현실화될 수 있다.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까지 제기된다면, 금호타이어발 ‘고용위기’는 도미노처럼 확산될 것이다. 이에 광주시와 광산구가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요청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다.

인근 주민들의 피해 역시 심각하다. 기침과 어지럼증을 호소한 인적 피해는 600건을 넘었고, 차량 그을음, 배란다 분진 등 물질 피해도 400건 이상이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는 1200건이 넘는다. 문제는 이 숫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 보상 기준과 절차, 시기 등이 조속히 확정되지 않으면 분진과 그을음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금호타이어는 광주의 대표 향토기업이다. 금호타이어의 위기는 단순히 공장 한 곳의 피해가 아니라 광주 전체의 회복력과 직결된다. 진정한 ‘완전’은 불길을 잡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복구 계획의 투명한 공개, 고용유지 대책, 주민 지원 시스템 구축, 협력업체 연쇄 피해 방지까지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불은 꺾였지만, 불안은 여전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화’를 향한 로드맵이 시급해 보인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방위사업청은 20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KF-21 최초양산 항공기 최종조립 착수’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립 중인 KF-21 최초양산 1호기. 방위사업청 제공

#### 서석대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첫 소송은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1954년 미국에서 시작됐다. 한 개인 흡연자가 폐암 진단을 받고 “담배 때문에 병들었다”며 법정에 섰다. 하지만 법정은 냉정했다. 의학적 증거는 부족했고, 흡연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았다. 기업의 방어 논리는 강했고, 소송 비용은 천문학적이었다. “흡연은 당신의 선택”이라는 말 앞에서 피해자의 진실은 늘 뒤로 밀렸다. 그로부터 40년, 흡연자들은 번번이 졌고, 담배 회사는 승소를 거듭했다.

1994년, 미시시피주가 움직였다. 처음으로 주정부가 담배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뒤이어 49개 주 정부와 시 정부, 건강보험조합이 잇따라 소송을 냈고, 마침내 1998년, 미국 46개 주는 필립모리스, R.J.레이놀드 등 메이저 담배회사들로부터 약 330조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합의의 받아냈다. ‘그들은 알고도 침묵했다’는 배심원의 판단은, 세계 공익소송사의 전환점이 됐다.

그리고 지금, 한국 법정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흡연 질병 치료비 53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루 한 갑,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폐암 환자 3465명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액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담배회사 손을 들어줬다. 인과관계 입증에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최근, 공단은 연세대 지선하 교수팀과 함께 13만명 이상을 10년 넘게 추적한 연구를 제출했다. 결과는 분명하다. 30년 이상 흡연자의 소세포폐암 발병률은 비흡연자 대비 54.49배, 흡연의 질병 기여도는 98.2%, 유전 요인 기여도는 고작 0.7%에 불과했다.

이제 과학은 기업을 옹호하지 않는다. 미국과 캐나다 법정이 그랬듯, 인과관계는 입증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 사회 여론도 공단에 힘을 실고 있다. 26개 약 학회, 17개 의료단체가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고, 시민 5만 명 이상이 서명 운동에 참여했다.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는 2021년 기준 연간 3조 5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흡연자가 내는 건강증진부담금은 한 갑당 841원에 불과하다. 비흡연자 역시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이 비용을 함께 떠안고 있다.

12년간 이어진 이 싸움은 단지 한 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아니다. 공공의 건강과 소비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선언이다. 오는 5월 22일, 최종변론이 열리며 판결을 앞둔 지금, 법이 내릴 판단에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성수 논설위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